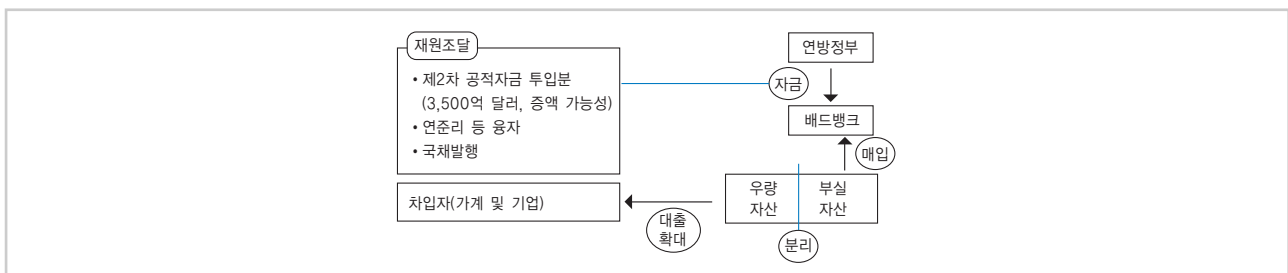


미국과 유럽의 배드뱅크 설립 구상 및 향후 과제

최근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일괄적인 부실자산 매입방안이 잇따라 부상하고 있음. 일단 미국과 영국은 손실공유 보증이나 민간금융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민간은행들이 자체 설립하는 특별목적회사 형태의 배드뱅크 지원을 통해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한다는 구상임.

- 최근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처리 및 대출 활성화 방안으로서 배드뱅크(Bad Bank 또는 Aggregator Bank) 설립 구상이 잇따라 부상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2월 10일 제2차 공적자금 투입을 앞두고 한층 보강된 금융시스템 안정대책을 공표하면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배드뱅크 설립 및 부실자산 매입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 동 금융시스템 안정대책은 은행들에 대한 추가 자본주입, 연준리의 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ALF)를 통한 자금지원 증액, 주택압류억제대책,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처리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부실자산 처리방안과 관련해서는 헤지펀드나 사모투자펀드 등 민간투자자들과 협력하여 관민투자기금(Public - Private Investment Fund)을 설립한다는 구상임.
 - 그러나 관민협력 형태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가격설정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반응이 확산되면서 당일 주가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낙폭을 시현하여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당초 시장에서 기대되었던 자체적인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 인수나 조건 없는 자본투입, 부실금융기관의 국유화조치 등에 대해서는 비용규모나 상대적인 복잡성 등으로 인해 연방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당초 미국의 배드뱅크 설립 구상





- 현재로서 미국 정부는 공동출자나 연준리의 브리지론 제공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관민투자펀드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대출채권이나 모기지담보증권 등을 일정액(약 5,000억~1조 달러)까지 매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타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씨티그룹이나 BOA의 사례에서처럼 개별적인 손실공유(loss-sharing) 보증설정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주간금융브리프(제18권 3호, 4호)〉 참조).

■ 최근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가 잇따라 배드뱅크 설립 구상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민간은행 자체의 배드뱅크 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들이 금융구제대책의 일환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자산이전 및 금융지원 등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 독일은 은행들이 정부보증과 회계기준 적용완화(부실자산의 시가이상 계상 허용 등)를 토대로 자체 설립한 특별목적회사에 보유한 부실자산을 이관함으로써 평가손 처리 확대에 의해 자본이 잠식되고 대출이 경색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 가결을 앞두고 있음.
- 독일은 부실자산에 대한 자금회수 책임 및 세입자에 대한 잠재적 비용부담이 큰 단일 형태의 정부 설립 배드뱅크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
- 당초 영국 역시 배드뱅크 설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지난 1월중 제2차 금융구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이를 유보하고 은행들의 자본잠식 부담을 우려하여 미국과 유사한 손실공유 보증형태로 대처하기로 함(〈주간금융브리프(제18권 5호)〉 참조).

■ 정부 설립이건 민간 주도이건 간에 배드뱅크 설립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비유동성 부실자산에 대한 가격설정 방식임.

- 배드뱅크가 거래불능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실자산을 매입할 때 과도한 평가절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은 평가손 처리 확대에 의해 자본잠식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기관들의 유사자산까지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이 연출될 수 있음.
- 반대로 적정가격 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혜택 없이 납세자의 잠재적인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실금융기관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양대 달성 목표가 균형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매입가격 설정에 신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금융구제대책이나 배드뱅크 설립 구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원 및 부실자산 매입가격 설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논의를 둘러싸고 지난 1930년대 자국산업 보호조치와 같이 해외대출 규제 등 금융보호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상 강화 및 독립성 확보 내지 국제연합(UN) 경제위원회 회로의 역할 대체, 국제금융감독시스템 개혁, 자국상품 우선주의(buy local provision) 규제 등 금융보호주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KIF**